

Cleveland, K., Knowles, S.G., and Shineha, R., eds., *Legacies of Fukushima: 3.11 in Contex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21. 344 pp.

최종민†

‘후쿠시마의 유산’은 계승되고 있는가?

동일본대진재(東日本大震災)는 흔히 동일본대지진이라 부르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지역에서 발생한 거대 지진과 쓰나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이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일본에서 통칭하는 말이다. ‘후쿠시마의 유산’이라는 제목이 보여주듯, 이 책은 동일본대진재 중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초점을 맞춰 다학제·다국적 전문가들이 논의를 전개한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크게 세 번의 핵피폭을 입은 국가이다. 첫 번째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폭탄 투하이고, 두 번째는 1954년 3월 1일 태평양 비키니환초에서 진행된 미국의 수폭 실험으로 인해 일본의 참치 어선 ‘제5후쿠류마루’가 피폭당한 사건이며, 세 번째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다. 일본의 원자력 정책은 제5후쿠류마루 피폭 사건 이튿날인 3월 2일 첫 원자력 예산을 제출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일본 국민들의 핵에 대한 거부감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담론과 국가재건, 성장 등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잠재우며 추진해 온 결과가 50기가 넘는 원전을 가동하는 원전 대국이 된 것이며, 아울러 여기에 파국의 점을 찍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 할 수 있다.¹ 이처럼 일본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경험이 이미 존재하지만, 이

†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선임연구원, mycutewani@naver.com

1 최종민, “일본 내각총리대신의 원자력담론(1947-1974): 발전주의의 접합과 안전신화의 형성”,

책에서 언급하듯 그 교훈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8).²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더욱 무게를 가지며, 그 유산을 어떻게 계승할지는 일본에게 주어진 시험대와 같다.

이 책은 후쿠시마로 원전 사고로 밝혀진 일본 사회의 어둡고 불합리하며, 비효율적인 측면들을 비추는데, 이에 대해 상위 주제인 세 개의 파트와 각 파트당 5-6개의 소주제 챕터들로 구성하고 있다.

첫 번째 파트는 ‘Learning from disaster’라는 제목과 같이 동일본대진재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향후 재해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 논한다. 특히 대규모 자연재해와 원전 사고에 대비하지 않은 일본 정부, 도쿄전력의 무책임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가 근대화 과정을 통해 형성해 온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있다. 이러한 논의 확장이 가능한 이유는 고도의 과학기술의 복잡한 결정체인 원자력 개발을 일본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왔고, 이 과정이 패전 후 일본의 국가재건, 성장과 궤적을 같이 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책에서는 일본의 원자력 규제 관련 조직에 만연한 반사적인 복종,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집단주의 등 문화적인 측면을 지적하거나(23), 원자력 이해관계 집단을 비판적으로 통칭하는 ‘원자력촌’(nuclear village, 原子力村)에 대해서도 조명한다(43-44). 특히 Chapter 5에서 일본의 원자력 정책 추진 과정을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를 통해 보면서 원자력촌이 정세, 관료, 원자력 산업계와 관련 학계, 언론 등의 행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이 발전국가 체제에서 원자력 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고, 사고 이후에도 원자력 회귀를 추진하는 핵심 동력임을 보여준다(77-94).

‘Public Knowledge and Trust’라는 주제의 파트 2에서는 일본의 원자력 규제포획, 비판적인 자세가 결여되어 있던 언론과 사고 진행 실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그들의 부작위, 사고 직후 일본 정부의 부적합한 대응과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원자력을 추진하는 동력인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의 구조 등 사고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집단을 면밀히 파헤친다. 이에

『담론201』 24:3 (2021), 7-43.

2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희생자들에 대한 검열과 차별(특히 미국 점령기)은 전국적인 논의와 논쟁을 침묵시켰고, 그 순간에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치유를 지연시켰다(7).” 또한 이는 1960년대 이후 일본에서 원전이 건설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8).

더해 주목할 만한 부분은 미국이 원자력 산업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탈원전을 원하지 않았으며, 민주당 노다 정권 당시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건 사례를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조명하는 시각이다(103-106). 이는 동북아시아 국가로서 원전을 추진하나 마느나는 개별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지정학적이며 국제정치적인 측면, 특히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통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것이 원자력 관련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해 왔다는 점에서 필요한 문제 제기라 할 수 있다.

‘Possible Futures’라는 제목의 파트 3에서는 세계 각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사능 측정 활동 사례, 후쿠시마 원전 주변 마을의 피난 구역 지정, 해제와 이를 둘러싼 논쟁, 재해 지역 상황과 괴리가 큰 국가의 부흥 정책, 후쿠시마 이후 미국의 원자력 규제 변화, EU의 스트레스테스트와 같은 범국가적 대응 사례를 다룬다.³ 즉, 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정보를 얻으려 하는 시민과 학과 이를 둘러싼 전문가간 네트워크가 보여주는 가능성, 올바른 부흥의 형태, 재해 지역과 주민들의 삶에 대한 관심 환기, 규제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후쿠시마의 유산을 어떻게 계승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듯하다.

이 책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인과 사고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밝혀진 일본 사회의 결함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사고의 원인을 역사적으로 추적하거나, 이전에 있었던 재해에 대한 대응 등 긴 시간 범위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현재 일본 사회의 체제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더해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과 지식도 폭넓게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후쿠시마의 유산을 적합하게 계승할지에 대해 필자는 단기적으로는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바이다. 비록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절대 안전 신화”(myth of absolute safety = risk free nuclear)에 대한 도전이 제기되었고(22), 일본 시민 대다수도 원전 재가동에 부정적이지만(38), 일본은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며, 시민사회도 일

3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미국과 연관이 깊다. 일본의 원전은 1998년 폐로 결정된 도카이발전소가 영국산 흑연감속로였던 것을 제외하고 모두 미국에서 수입한 경수로이다.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도 6기 모두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으로부터 수입한 MARK-1-I라는 비등수형 경수로이다. 따라서 미국 규제 측도 이 사고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었으나,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미국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았으며(26), 미국 위험거버넌스의 방향성을 바꾸지 못했다(27).

부를 제외하고는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열망도 적어 보인다. 아울러, 일본의 원전 추진에는 다수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에 더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개발에 들인 비용과 관련 행위자들의 추진 의지, 축적된 플루토늄 문제가 원전 재가동을 촉진하는 강력한 관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⁴ 또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다. 사고 당시의 도쿄전력 임원이 사임하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보안원이 해체했지만, 이들은 도쿄전력 관련 회사나 다른 정부 기관으로 거취만 옮기는 등 엄격한 책임소재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⁵ 부정적인 전망은 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사고 이후 일본이 추진한 규제개혁도 사고의 교훈을 반영하지 못하였거나(45),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다음 재해를 더욱 악화시킬 것(48)이라는 등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후쿠시마의 유산을 논해야 하는 것은, 아직도 사고가 진행 중이며, 사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본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재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벌어지는(215) ‘풍화(風化)’ 문제도 지적되어 왔다.⁶ 풍화 경향은 사고로부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보였고, 도쿄올림픽 개최 등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의 관심은 재해 지역으로부터 멀어져갔다.⁷ 이러한 상황에서 후쿠시마의 유산과 교훈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더욱 절실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일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직면한 문제이다.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누출되는 방사능만이 아니라, 한국 원전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같이 후발주자로 출발하여 단기간에 원전 대국이 된 한국 역시 안전 규제가

4 최종민, “한국과 일본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체계 형성과정 비교연구”, 『ECO』 26:1 (2022), 359-407.

5 최종민·윤순진,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내재한 원자력 안전 신화와 조직화된 무책임”, 『ECO』 21:2 (2017), 141-179.

6 일본어로 ‘풍화’는 기억과 관심이 흐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본대진재 11주기를 맞은 2022년 3월 후쿠시마 지역신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재해 지역이 일본 국민들의 재해에 대한 풍화를 실감하고 있으며, 재해의 교훈을 전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被災9市町村「風化」を實感 大熊「震災経験の職員5割以下」(피재 9개 시정촌, ‘풍화’를 실감, 오쿠마 ‘진재 경험 직원 50% 이하)”, 『福島民友新聞』, 2022. 3. 10.

7 七澤潔, “操作された「記憶の半減期」: フクシマ報道の4年間を考察する”, 『サステイナビリティ研究』 5 (2015), 71-89.

잘 작동하는지,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항상 주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질 토양이 형성되어 있는가? 최근 한국은 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관련 논의가 극도로 정치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조차 진영 논리로 다루어져 우려스러운 바이다. 안전 문제가 이데올로기와 연결되는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예방할 수 있을까? 우리는 원전 사고를 막을 준비가 되어있는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는 안전의 정의에 대해 진지하게 논하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후쿠시마의 유산은 계승되지 못할 것이다.